

대선후보 정책질의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질의 분야

- ◇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2개 질문)
- ◇ 과감한 규제혁신(2개 질문)
- ◇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2개 질문)
- ◇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1개 질문)
- ◇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1개 질문)
-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1개 질문)

◇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 디지털 경제 리더십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과 아울러 범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질문 1]** 청와대 내에 혁신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범부처 총괄 및 유관 기업과 소통하며,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이재명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는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IT·SW 기반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전략기구 설치' 공약을 통해, 부처간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규제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임.
 - 특히,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민간부문 주요 플레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며,
 - 신규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 할 것임.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구의 주요업무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 △부처간 중복·유사 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산업분야별 첨단기술 융·복합화 등 미래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규제외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혁신 추진

[윤석열 후보 답변]

-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사이트를 모두 통합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의 니즈와 현안에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민첩한 정부를 지향

□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정책전환

- 4차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정부 주도 방식의 경제발전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시장에 공공이 직접 뛰어들어 논란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질문 2]** 디지털 경제 시대에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아울러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만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불가능함.
 - 제안주신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사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재명 정부는 혁신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할 것임.
- 특히 신산업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ICT, K-콘텐츠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는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마중물 선투자하는 등 '민간주도 정부조력 방식'을 적극 추진할 것임.
-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런칭했던 것과 같이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시장의 경쟁이 막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봄

[윤석열 후보 답변]

-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기조는 '역동적 혁신성장'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민간의 역할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

◇ 과감한 규제혁신

□ 규제혁신 위한 제도추진

- 현재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방식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슈 발생 이후 개별 규제를 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신기술의 발달,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포지티브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질문 3]**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임시허가 비율은 적고, 기업의 사업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증특례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규제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성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
 - 신기술의 규제유예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3년이 되었음. 이 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632건의 규제유예가 시행되었으나 실증특례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임
- 실증특례는 엄격한 실증조건, 실증특례 한계상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며,
 - 창업가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지사시절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했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발판삼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제도 및 방식을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 ※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7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은,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 실증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지원했음.
- 경기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빈틈없이 개선하고 기술혁신 기업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것임.

[윤석열 후보 답변]

-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 **[질문 4]** 이와 아울러 ①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를 설립·운영해 특정 기술 중심으로 관계되는 여러 기관의 규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혁신해 복잡한 규제요인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②의원발의를 포함한 전체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실시해 과잉규제 및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어야 할 때임.
 - 이재명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 기존의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제안주신 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해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어, 이해당사자 한 측의 입장만 반영되어 신산업이 가로막히는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이재명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입법은 우회 의원입법 없이 정부가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며,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그 필요성과 함께, 헌법기구인 국회 의원의 입법권 침해 측면도 고려하여 국회에서의 적극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바임.

[윤석열 후보 답변]

-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인력양성 정책 혁신 및 민간 중심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디지털 경제는 본질적으로 인재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보다 창의적이면서 융·복합적 역량을 지니고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는 매우 부족해 기업간, 국가간 인력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 **[질문 5]**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인력 필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디지털 경제전환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도 디지털 인재, 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남
 -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 하겠다'.
 - 공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함. 이를 위해 '내실 있는 SW·AI 학교 교육'을 실시할 것임.
 -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부터 맘껏 자질과 소양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과정,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것임. 또한 교과과정에서 SW·AI(정보과목) 교육 필수시간을 주 1회(매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 초등학교 SW 교육 지원 및 지역의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에서 SW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도입하겠다
 - 또한 대학과 대학생들을 전폭지원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재교육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의 역량을 강화해 우리청년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임.
- ※ 이재명 후보 관련공약(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SW,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先선지원하고, 취직후 後일부(약 70%)를 갚는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 도입
 - 기존의 AI대학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을 통한인재 양성 지원 강화, 'SW중심대학'은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 필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 지원
 - 군(軍)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더욱 확대
 -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SW·AI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

[윤석열 후보 답변]

- 위드 코로나,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 이를 위해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및 대학에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학과 확대 및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와 학력 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를 육성

- ▶ **[질문 6]** 또한 기업이 자신의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특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지원에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수요기업인 중소·벤처기업은 AI 도입·활용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난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체계적인 AI개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혁신인재양성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민간중심의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핵심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시행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육 및 채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R&D인력에 대한 소득세 일정비율을 감면, 석·박사 이공계 대학원생이 졸업한 후 스타트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할 경우에도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비즈니스 전문가양성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기술-비즈니스 이해가 높은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양성 확충 등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연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

◇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대기업 CVC 투자 대폭 완화 및 복수의결권 신속 도입

- 스타트업은 빠르고 유연한 특성상 혁신에 성공한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창업자의 의사결정권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질문 기]** ① 민간투자 확대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CVC와 대기업의 M&A 활성화로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과 대규모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에서 더욱 완화된 대기업의 CVC 투자 촉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② 스타트업 창업자가 기업을 성장시킬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혁신형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보유기준과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기준 완화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제도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M&A 세제지원, 세컨더리 펀드조성 등을 통한 모험자본의 회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특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CVC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전략적 투자로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이 CVC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창출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산업자본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모기업과의 사업협력·M&A 가능성이 많아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정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 강화

◇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 유연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노동제도 도입

- 전통적인 노동규율은 제조업 기반 경제체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동시장과 달리 유연하고 빠르게 성장하며,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스타트업의 구조적 특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질문 8] 노동시간 · 임금 · 고용 유연성 등 스타트업, 혁신기업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20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고, R&D 직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3개월의 정산기간 동안에 초과근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지금도 필요한 경우 특정기간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
 - 법 테두리 내에서 직원건강과 기업생산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운용해야 함.
-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2개월에 불과(대기업 7.9년, 중소기업 3.5년)
 - 스타트업, 혁신기업의 경우에 유연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도 일과 생활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및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다기능화를 위해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음.
- 임금은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임금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책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음.

[윤석열 후보 답변]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민간주도 거점 구축, 인력확보 지원 등

-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과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91.3%, 예비유니콘 기업의 87.7%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 **[질문 9]** ①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투자 펀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②지역 스타트업과 생태계 이해관계자는 물론 타 지역 스타트업 종사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③지역 혁신 인재양성 및 해당 인재의 지역 근무 유도, 타 지역 인재 영입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채용기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다가오는 대전환시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니콘기업을 포함하여 아기/예비 유니콘기업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별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하고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혁신지원기관을 포함하여 민간 및 정부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드 조성하여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선배스타트업-정부-지자체가 공동 조성하되,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법인세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지역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17개 광역지자체 중심의 옴부즈만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규제까지 세심히 관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지역전략산업)와 연계 실증센터 설치 및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 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 추진